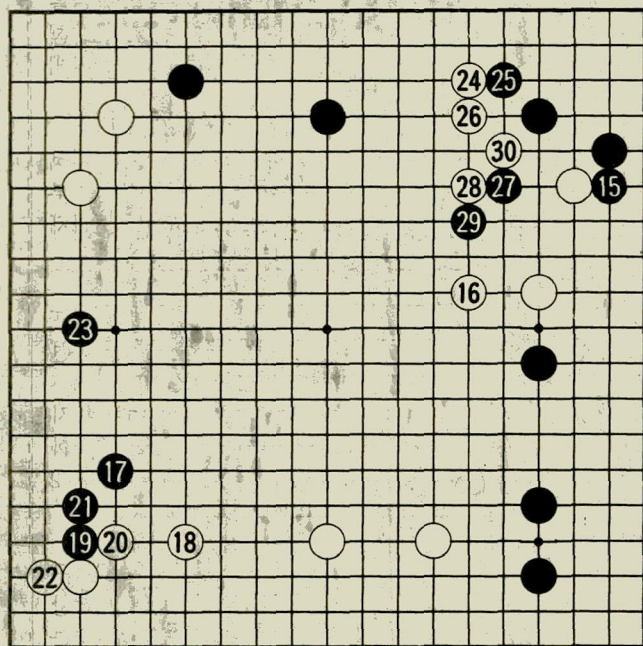


프로-아마 대항 10강전

〈제3국 8위전〉

백 백성호 (프로 8단)

정선 조민수 (아마 5단) 덤 5집 받음



제2보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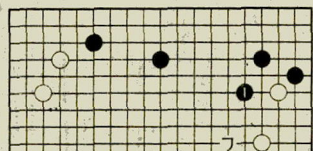
실리치우친 흑15

조민수 아마 5단의 다음 한수는 흑15, 그러나 실리에 치우친 수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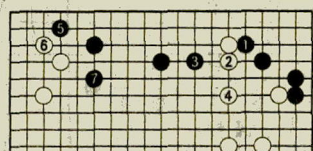
정착은 1도의 흑1, 이 흑1을 예상한 독자는 감각이 일품이다. 경쾌한 백16에 비로소 흑15가 잘못임이 드러난다. 그것은 흑15가 갖는 소득과 백16이 갖는 발전력을 비교해 보면 까닭을 알 수 있다. 1도의 백7이 가수된 연후에 흑1로 추궁하는 것은 뒷북치는 수라 어쩔 수 없이 흑17로 기수를 돌려지만 백24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어 선제 공격권을 넘겨주었다.

뒤늦게 흑25, 흑27(1도 1의 곳)로 가르고 나왔으나 백의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된다. 결과부터 따지면 흑27로는 2도와 같이 흑3 백4를 교환하고 흑5, 7로 상변을 정비하면 그런 대로 형세가 나쁘지는 않은데 미처 감각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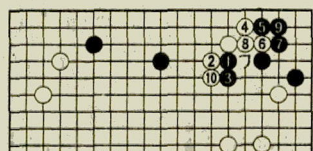
초·중급자를 위해 보충설명을



(1도)



(2도)



(3도)

하면, 흑25를 흑1로 붙이는 것은 상변 흑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일례로 백2부터 10까지의 절충을 예상할 때 7쪽 단점이 남아 좋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상국/전문기사 7단

〈월간 바둑〉 협찬

교육초점

학부모 후원금 '울며 겨자먹기'

필요성·장점 공감불구 시설비용 학부모 전가엔 '짹짹'

97년까지 100% 완료 예정...남은 문제는 철저한 실시

박찬수 기자

국민학교 3학년과 6학년 아이들 둔 학부모 박아무개(40·여)씨는 지난달 초 학교쪽으로부터 학부모 총회에 참가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나갔다.

안건은 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쪽으로부터 "40평짜리 식당을 지으려면 1억8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정부 보조는 4천3백만원에 불과하니 학부모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뒤 곧장 가부를 묻는 표결이 진행됐다.

학교쪽이 협조를 구한 마당에 반대의견이 제기될 리 없었다. 참석 학부모의 90% 이상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됐고, 며칠 뒤 집으로 후원금 액수를 적어내라는 가정통신문이 배달됐다.

박씨는 고민 끝에 10만원을 써냈다. 박씨는 이에 대해 "가계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학교급식의 장점이 많고 아이들 처지도 생각해 후원금을 냈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지난 7월 한달 동안 급식문제를 둘러싸고 고민을 해야 했던 학부모들은 서울시내 상당수 국민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술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지난 6월17일 개정됨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후원금을 걷어 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일체 기부금을 걷을 수 없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쪽이 원해도 정부의 전액지원 없이는 급식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었다.

1개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도시지역

의 경우 보통 1억5천여만원 정도다. 이를 전국 모든 국민학교에 확대하려면 모두 6천7백32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국민학교 급식을 100%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설치하면 안되는 건의를 많이 받았다"며 "이제 우리 생활수준도 교육시설비의 일부를 학부모들이 낼 정도가 됐다고 판단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학교급식의 장점은 많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체위 향상에 큰 효과가 있다. 학교급식을 통해 편식하는 어린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똑같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기르고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급식시설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급식시설 설치비용 중 절반을 학부모들이 부담할 경우 보통 학생 한명당 6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이는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학부모 유아무개(40)씨는 "가정통신문에 후원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돼 있지만 안낼 경우 아이들 사기가 죽을까봐 6만원을 냈다"며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B국교의 박아무개(30·여)교사는 "각 반에 3백만원씩 할당해 후원금을 걷었는데, 학부모들의 회의적 여론도 적지 않아야

학생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얼마 냈다는 게 화제가 되곤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도별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제주도가 8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남(51%) 경북(49%) 강원도(48.6%) 차례다.

서울 등 나머지 시·도들은 대개 10~30%대의 낮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중 1백3개교에 학교급식을 확대해 급식 실시율을 60%로 끌어올릴 계획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월 한달 동안 후원금 모금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의전화와 항의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후원금 모금이 시작되자 그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평가다. 그만큼 학교급식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확산해 있다는 얘기다.

교육관계자들은 일단 논란 끝에 학부모들의 후원금을 받기로 한 이상 이제 문제는 각 학교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충실하게 급식을 실시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벌써부터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시설인 주방기구 수주를 둘러싸고 특정업체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행정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새로 마련된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후원금을 낸 학부모나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가 후원금의 집행상황을 감독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학교급식은 급식 본래의 목적과 함께 학부모가 제한적이나마 학교행정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